박지원 "'문·안·박'으로도 안돼…탈당 불사"

호남 의원 23명 서울서 회동…"이러다간 총선 필패"

오늘 성명서 발표…주류 반발 "판 깨자는 것이냐"

새정치민주연합 호남지역 국회의원들은 26일 여의도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문재인 대표가 제안한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공동 지도부'로는 돌아선 호남 민심을 잡을 수 없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특히, 문 대표가 자신의 사퇴 등 거취를 거론하는 세력에 대해 '총선 공천권을 노리는 것'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공개 사과를 요구하기로 했다.

호남 국회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성명서를 27일 발표한다.

이날 회동은 무소속(천정배·박주선)과 새누리당(이정현)을 제외한 호남 새정치연합 소속 국회의원 27명 가운데 23명이 참석했으며 당초 불참이 예상됐던 친노·주류성향 의원들도 대부분 참석했다. 이날 회동에서 대부분의 호남 국회의원들은 문 대표에 대한 비판을 가감없이 쏟아냈다.

회동을 제안한 주승용 최고위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 복원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호남권-수도권이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열린우리당 이래, 호남은 개혁과 청산의 대상으로 남았다"며 "(문 대표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는데' 이 이상 호남이 어떻게 더 죽느냐"고 꼬집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어 "제 귀에 들리는 민심은 문 대표로는 안 된다, 어떤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라며 "이제 민심과 명분이 갖춰졌다"고 탈당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김동철 의원은 "문재인 대표의 사퇴는 총선 승리의 필요조건"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으며 전북도당위원장인 유성엽 의원은 "문 대표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여러 가지 미봉책을 찾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남도당위원장인 황주홍 의원은 "호남에서 당과 대표에 대한 지지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으며 전북의 강동원 의원은 "수도권에 사는 호남민들이 투표장에 가지 않겠다고 단언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하지만 이날 회동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친노·주류 성향 의원들이 호남 민심의 심각성은 공감하지만 문 대표를 집중 비난하는 성명서 발표는 "판을 깨자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문 대표의 '문-안-박' 공동지도부의 한계와 제안 과정에서의 문제점, '공천권'을 운운한 발언이 적절치 않은데 공감하지만 비판의 톤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결국, 주류와 비주류 의원들은 성명서 초안에 적시된 호남 역차별 연대, 초법적 제안, 호남 민심 모욕, 당의 통합 저해 등의 용어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27일 최종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당내 범주류로 분류되는 초·재선 의원 50여명은 27일 안 전 대표의 문·안·박 연대 수용을 호소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조문정국' 마무리와 함께 내분 위기는 다시 고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安, NO ?

"내년 총선 승리 회의적"

문·안·박 제안 거부할 듯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문재인 대표의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공동지도체제' 제안을 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비주류 핵심 인사는 안 전 대표가 문 대표의 제안에 대해 "'문-안-박 체제로는 내년 총선 승리가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 인사는 이어 "안 전 공동대표가 문 대표의 제안에 대해 즉각 대응하지 않고 입장 발표를 늦춘 점에 대해서도 '후회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비주류 진영에서는 안 전 대표가 29일 회견에서 문 대표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당의 난국을 돌파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안 전 대표 관계자는 "29일 회견은 당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문·안·박 연대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안 전 대표가 문 대표를 향해 패권주의 청산, 계파주의 해소와 함께 야권 통합과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한 통합 전당대회 개최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한편, 당내 일각에서는 문 대표와 안 전 대표가 29일 회견 전에 전격적으로 회동, 파국을 피하는 해법 마련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입장 발표에 앞서 박지원 전 원내대표 등 호남 중진들과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오른쪽)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의 내년도 세비 인상분 반납 결정을 밝힌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 세비 2% 인상 '없던일로'

예결위 여야 간사 반납 합의

국회의원의 내년도 세비가 2% 인상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세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에서 "언론에서 보도된 '세비 3% 증액'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는 정부 전체 공무원 인건비 3% 인상분이 반영된 것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증액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는 이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세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원 일반수당과 입법활동비 가운데 수당을 3.0% 올리고 입법활동비는 동결, 전체 세비 인상률이 2.0%가 되도록 하는 예산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예산안을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 봉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은 월 646만원에서 665만원으로 19만원 오르며 전체 세비는 1억4024만원이 된다.

사무처 관계자는 "정부가 확정한 공무원 공통 보수 증가율(3.0%)을 준용한 것"이라며 "2013년부터 국회의원 세비가 3년 연속 동결돼 일반 공무원과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자동차 100만대·세계수영대회 호남 현안 예산 반드시 확보"

광주시장·지역 의원·새정치 지도부 '예산 간담회'

새정치민주연합 예산 관련 원내지도부와 윤장현 광주시장,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예산간담회를 하고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예산심의에서 광주지역 현안사업 예산이 확보 또는 증액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 시장은 "내년 예산확보에 있어 광주시에는 절박함이 있다"며 지역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확대를 위한 사업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촉구했다.

박혜자 광주시당위원장은 "자동차 전용산단 설계 등 관련 사업예산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광주시민들의 자존심이 걸린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 운영예산과 25일 정식개관한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사업비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종걸 원내대표는 적극적으로 광주·전남지역 예산을 챙기겠다고 답했다.

예산소위 야당간사인 안민석 의원도 "정부여당에서 호남의 예산을 전략적으로 잡아두고 있는 면이 있다"면서 "투트랙 전략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 역시 "지금부터는 정치적 결단의 싸움"이라면서 "친환경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사업을 최우선으로 하고, 곧 이뤄질 비공개 협상을 통해 수영대회 예산과 아시아문화전당예산을 어떻게든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지역 의원 중 박 위원장과 장병완·권은희 의원 등 3명이 참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시위 근절" vs "자유 침해"

'복면 금지' 법제화 놓고 여야 또 충돌

여, 개정안 발의…헌재 2003년 위헌 결정

집회 도중 얼굴을 가리는 복면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복면 금지' 법제화를 놓고 여야가 또다시 맞붙었다.

여당은 폭력 시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법을 잇따라 발의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반면 야당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 등은 지난 25일 집회·시위에서 복면 착용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폭행·폭력 등으로 치안당국이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나 시위의 경우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는 복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고, 이를 포함해 시위 주최자가 관련 준수사항을 거듭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나 성매매 여성들의 시위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예외를 허용했고, 비폭력 침묵시위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복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당 이노근 의원도 시위대가 복면 도구를 제거할 것을 3회 이상 요구받고도 따르지 않을 경우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추가한 집시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복면시위'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한 뒤 새누리당 의원들의 입법 충성경쟁에 눈살이 찌푸려진다. 날림졸속 입법의 전형"이라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진국들에서도 복면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다면서 복면금지법을 도입하자는 주장은 그 입법 목적의 차이를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며 독일·프랑스·미국사례를 예로 들어 "하나같이 반인륜적·인종차별적·국수주의적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3년 10월30일 집시법 11조 1호(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헌법이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의 의미에 대해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장소·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주최자는 집회의 대상·목적·장소·시간에 관하여, 참가자는 참가의 형태와 정도,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17대와 18대 국회에서 추진됐던 '복면 금지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 또는 통과되지 못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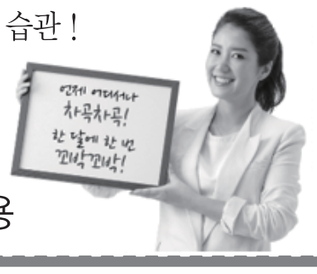
"MG여성만세예금" 이란?

알뜰한 당신에게
"MG여성만세예금"을
추천합니다.

만 18세 이상인 여성들에게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 통장 !
(단, 수수료 면제 조건이 충족 되어야 면제 됩니다.)

"MG new 정기적금"

예금을 크게 키우는 똑똑한 금융 습관 !
가입조건에 따라, 우대이율이
제공되는 정액적립식 예금 !



▶ 1년 최대 2.6% 이율 적용

담보대출
APT, 주택, 상가, 대지 감정가 대비 70% 가능
보증서 담보 대출(햇살론) 최대 2,000만원 가능
임대보증금 대출 보증금 대비 최대 80% 가능

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담보대출 보유시 우대금리 적용)

※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크기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결제계좌 변경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건수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 지원 가능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